

특고·프리랜서 소득 69% 급감... 저소득일수록 감소폭 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신청자 분석

고용부, 총 175만6000여명 신청
영세자영업자 63%, 특고 33% 등
여성 7%p, 40~50대 비율 높아
수급자 46% 소득하위 20% 해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일~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일 밝혔다.

먼저 긴급지원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는 근로형태별로 영세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만7000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지난 10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시민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4.0%)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7.0%포인트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포인트 높았고, 영세자영업자는 남성 비율이 다소 높게(8.7%포인트)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 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이(55.2%) 가장 높았다.

전체 수급자의 46%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했고, 수급자 82.9% 기준으로는 소득하위 40%에 속했다.

특고·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17.8%, 10만5000명)가 긴급지원금을 가장 많이 신청했고, 이어 교육관련 종사원(17.6%, 10만3000명), 서비스관련 종사원(6.6%, 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4.1%, 2.4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볼 경우,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학습지교사(3.9%), 대리운전기사(3.8%), 방문판매원(3.8%), 방문

교사(1.9%) 순이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로 볼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은 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1분위(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감소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떨어졌고 6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55.7%로 1분위보다 19.9%포인트나 낮았다. 직종별로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보면 방문 교사(66.2%)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 모집인(50.3%), 건설기계 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의 순이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매출의

구분 등 통계 기법상 한계로 소득 감소율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원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 자료를 제출한 28만700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805만원이었고 매출 자료를 낸 64만1000명의 평균 연 매출액은 5022만원이었다. 수급자의 평균 소득은 여성(1674만원)이 남성(1926만원)보다 252만원 낮았다. 평균 매출액도 여성(4901만원)이 남성(5119만원)보다 218만원 적었다. 지원금을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는 남성(59만7000명)이 여성(50만1000명)보다 많아 특고·프리랜서와 대조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정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드림수입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동부구치소 재수감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형량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손진영 기자 son@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 취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라고 해도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 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를 비롯해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급서비스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급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로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제외대상을 정해냈다. 시행령은 여기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등의 요건을 마련했다.

특금법이 내년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을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라며 "설립 인허가나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셀트리온·태영, 지주 설립... KT, 케뱅 편입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변동현황
셀트리온, 헬스케어홀딩스 신설
태영, 티와이홀딩스 설립 지주전환
카카오, 콘텐츠 강화 4개사 지분인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셀트리온·태영이 새 지주사를 설립했고, KT는 케이뱅크를 계열 편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최근 3개월(8월1일~10월31일) 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주사 체제 확립을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주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신설했다.

태영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태영건설을 인적 분할해 티와이홀딩스를 설립했다.

카카오는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소속회사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파괴연구소·필연메니지먼트·배틀엔터테인먼트·인타임 4개사 지분을 인수했다.

금융사 지분을 취득해 계열에 편입시키거나, 소속 회사 업종을 비금융업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KT는 소속회사인 비씨카드가 무의결권 전환 주식의 보통주전환권을 행사해 케이뱅크은행의 최다 출자자(지분율 34.0%)가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케이뱅크를 계열 편입했다. 농협·미래에셋·한국투자금융·IMM인베스트먼트·다우키움 대규모 기업집단 5곳은 펀드 운용사(GP)로 참여해 금융사의 지배력을 얻었다. 유진프라이빗에쿼티는 사모펀드(PEF) 운용 수익 매출액 등을 고려해 업종을 금융업으로 변경했다.

대규모 기업 집단 간 지분을 거래해 소속 집단이 바뀌거나, 친족의 독립 경영으로 소속 집단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투자금융은 드림라인·드림마크·원·드림라인홀라파워2호 3개사의 보유주식을 IMM인베스트먼트에 모두 매각했다. 카카오는 총수 친족이 운영하는 빌드제가 독립 경영을 결정함에 따라 기업 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조사 대상 집단 64곳의 소속 회사는 2301개에서 2325개로 24개 증가했다. 56개 편입, 32개 제외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 설립 30개(신규 27개·분할 3개), 지분 취득 15개, 기타 11개다. 제외 사유는 흡수 합병 12개, 지분 매각 7개, 청산 종결 6개, 기타 7개다.

/한용수 기자

日, 금리인하 후 10년... 대부업체 73% 줄어들어

>> 1번 '진퇴양난 금리정책'서 계속

특히 소비자 신용대출 잔액은 2009년 11조원에서 절반 이하인 4조1000억으로 감소했다.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담보 등이 없는 신용대출 잔액을 중심으로 줄여나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대부업에서 밀려난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이 동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본 금융청의 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 경험자 중 원하는 돈을 대출받지 못한 비율은 2010년 30.3%에서 2020년 43.2%로 증가하고, 불법 대부업 이용 경험자는 같은 기간 1.2%에서 8.8%로 늘었다.

소비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피해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 많은 자금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어 정책금융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대부금융 시장은 공급 금리 탄력성이 커 최고금리인하 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초과수요까지 겹치면 금융 소비자들이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연구보고서(Impact Of Restrictions On Interest Rates In Microfinance, 2016)를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금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규모의 경제로,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의 대출규모를 늘리면서 평균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

우선 저신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균비용을 보장토록 하되 대부업의 경쟁이 제2금융권의 경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유리 기자 yul115@